

국회 이원욱 의원실 주최 GMO표시제 토론회
토론자 발표내용

GMO 표시문제 - 국가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다루어야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GMO표시제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의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어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식약청이 일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밀려 선부른 결정을 내렸다는 여론이 컸다. 정부가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파급효과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크므로 광범한 비용효과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GM식품 표시확대 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1996년 유엔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각 나라가 식량안보에 유념할 것을 권장하고, 식량안보는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안전성 포함)으로 확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식품의 안전성은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안전성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서 식품 낭비와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풍족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 곡물 수요의 30%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70% 이상을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 밀(300만톤)과 옥수수(800만톤)는 전량, 콩은 90%를(120만톤) 수입해 와야 한다. 쌀 자급(450만톤)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non-GM 옥수수와 콩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의 90%가 GM품종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GM콩과 GM옥수수를 재래종과 구분하지 않고 먹고 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입해 먹어야 하는 한국에서 일부 단체가 집요하게 생명공학 작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기조발제자가 주장하는 GM식품의 표시제 확대는 국가 식량안보적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지난 수년간 거듭되었고 그때마다 GMO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위험 사례들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학계에서 반박해 왔다. 유럽 국가들도 GMO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며 그들의 GM표시제가 안전성 보다는 정치적 이슈(무역장벽을 위한)라고 인정하고 있다. 유럽은 곡물을 자급하므로 미국의 값싼 곡물이 그들의 농업을 무너뜨리게 놔둘 수 없다.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 일본, 대만이 유럽의 표시제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제는 GM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들고 나와 유럽과 같은 수준의 표시제를 주장하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로부터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발제자가 나열한 그 많은 어려움과 비용을 무릅쓰고 표시확대를 해야겠는지 냉철하게 비용편익분석을 하기 바란다. 오히려 국민을 위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잘못 주입한 GMO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부 건전한 소비자단체들이 최근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교육 홍보 노력을 하고 있다.

30년 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에 달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지구 사막화, 바이오 연료의 생산, 중국과 인도의 동물성 식품 소비 증대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곡물이 고갈되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한 농업 생산성 향상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항상 부작용을 안고 있다. 전기의 발명과 핵에너지의 사용도 처음에는 잘 관리할 줄을 몰라 감전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무서운 위해를 많이 겪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발전시킨다.

GMO도 처음에는 그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이제는 대단히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거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GM작물 생산은 계속 늘고 있으며 불원간 지구상의 대부분 작물들이 GM품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식품부가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연구하고 교육 홍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MO표시제 개정안이 4년간이나 유보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안이다. 따라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주변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 살펴서 슬기롭게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국민을 덜 위하고 식품안전을 등한히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해서 GM식품 표시확대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표시확대로 야기되는 (1)국민의 GM식품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 확산, (2) 불완전한 검사방법으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신뢰 추락, (3) non-GM 원료 선별에 의한 비용 상승과 물가 불안, (4)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불능으로 인한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불이익, (5) 식량 및 식품 수급에 미칠 악영향 등으로 함부로 표시확대를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다.